

개성공단 폐쇄 5년,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

개성공단 폐쇄 5년, 우리 기업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공단 재개는 기약이 없고 남북교류협력은 모두 단절됐다. 5년 동안 우리 개성기업인들은 하나둘씩 쓰러져갔지만 위법한 공단 폐쇄에 대해 정부의 어느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았고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됐다.

정부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손실에 대해 헌법23조는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상법률이 없어서 정부는 보상하지 않았다. 5년 동안 우리는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힘겹게 버티며 참고 기다렸다.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고 실질적으로 공단이 재가동 할 때까지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하지 않고 있다. 우리 기업인들이 바라는 것은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개할 의지가 확고함을 분명히 밝혀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미국의 지나친 관여로 자주적으로 개성공단 재개 선언조차 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개성공단의 청산을 요구한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청산하고 개성공단기업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정부입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과 보장약속을 믿고 투자한 우리에게 지난 정부 위정자의 갑작스런 정책변경과 강제적 폐쇄조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부는 마땅히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라.
2. 정부는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3. 잘못된 판단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4. 위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개성공단을 청산하라.
5. 지난 정부의 중대한 판단실책과 돌발적인 정책변경으로 발생한 기업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

2021년 2월 9일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입니다.

개성공단이 갑자기 폐쇄 된 지 만 5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등 산적한 국정과제 해결을 위해 고심이 깊고 크시겠지만 더 이상은 정부의 결단을 무한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 대통령님께 우리의 소망과 의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5년 전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폐쇄조치는 대북국제제재 때문이 아닌 전임 대통령의 즉흥적, 독단적 결정에 의해 이해당사자인 기업들에게 사전예고조차 없이 위법하게 강제된 정치적 행정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왜 개성에 투자하고 입주하였는지 대통령님께서도 익히 아실겁니다.

북한투자가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우리는 당시 우리정부의 약속 “50년간의 자율적인 기업경영과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전적인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를 믿고 허허벌판이던 개성공단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기 우리 개성기업들은 홀대와 편견에 시달리면서도 남북평화와 공동번영의 초석을 이룬다는 나름의 소명의식으로 견디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2013년 북과 함께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약속했었음에도 하루아침에 그 모든 약속을 깨고 공단을 폐쇄했습니다.

우리는 그 해 겨울 내내 “이게 나라냐?”는 마음으로 추운거리에서 촛불을 들었고 감격과 희망속에서 문재인정부의 출범을 기쁘게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위법한 공단폐쇄로 인해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실제 피해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보험금 위주의 대출성 지원을 받았지만 곧 개성공단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티고 기다려왔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9.19 평양선언을 보며 곧 개성공단이 재개될 희망에 가슴 벅찼지만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개성공단재개의 희망은 희망고문이 되었습니다.

금년 대통령신년사에서 개성공단재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도 확인할 수 있기를 고대했지만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개성공단재개에 미국의 동의를 구해야만하는 우리 정부의 어려움을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위법한 공단폐쇄조치로 유발된 피해를 떠안고 하루 하루, 한 해 한 해 힘겹게 버티고 견뎌온 개성기업들에게 기약없이 기다리라고만 할게 아니라 우리 정부의 공단재개의지라도 밝혀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개성에 갔고 정부의 잘못된 강제조치에 의해 사업장을 잃은 개성 기업들로서 우리 정부가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대통령님!

공단 폐쇄 이후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생산시설이 여러곳으로 분산, 운영되던 대기업 빼고는 나머지 개성기업들은 경영난이 극심합니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 포함해 30%이상의 기업들이 휴업 내지는 사실상 폐업상태입니다.

작년에는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졌지만 정부지원은 전무했습니다.

2018년 초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추가지원을 무기삼아 입주기업들의 의사에 반해 개성기업들이 투자자산 및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 이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고 마치 기업피해지원을 원만히 마무리한 것처럼 포장한 것은 진실로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기재부와 통일부의 횡포였음을 뒤늦게라도 대통령님께서 아셔야 합니다.

대통령님!

개성공단재개의 희망을 포기하기 전 정부의 확고한 재개의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는 희망을 접고 공단의 청산, 정당한 보상을 주장해야하는지 아니면 정부를 믿고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는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버텨야하는지 대통령님께서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2월 9일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정기섭